

터키 7.2 강진... 사망자 200명 넘어

통신·전기 두절... 구조작업 악전고투

한국정부, 구조대 급파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터키 동남부를 강타한 지 하루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수색·구조 작업이 본격화 한 가운데 확인된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었다.

이드리스 나임 사한 터키 내무장관은 에르지쉬 군(郡)에서 117명, 반시(市)에서 100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부상자는 109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건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색작업 악전고투=23~24일에 걸쳐 철야로 진행된 생존자 및 시신 수색작업은 추위와 지진에 따른 정전 사태 등으로 최악의 조건속에 진행됐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터키 38개 도시에서 차출된 수색·구조요원

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통신서비스가 봉괴돼 서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진 발생 직후 반시 교도소 수감자 200명이 탈옥했으며, 이 중 50명은 재수감됐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국제사회 지원의사 표명=이스라엘, 아르메니아, 미국, 러시아, 독일, 그리스 등 각국 정부는 터키에 위로의 뜻을 표하고 구조인력 파견과 구호물자 제공 등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강진 피해를 당한 터

1275명과 구급차 145대가 피해 현장으로 급파됐으며, 병력 6개 대대, 헬기 6대, C-130 군 화물 수송기 등도 구조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악전고투 속에서도 24일 새벽 한 건물에 매몰돼 있던 주민 24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터키 민영 도간 통신을 통해 전해졌다.

◇국제사회 지원의사 표명=이스라엘, 아르메니아, 미국, 러시아, 독일, 그리스 등 각국 정부는 터키에 위로의 뜻을 표하고 구조인력 파견과 구호물자 제공 등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강진 피해를 당한 터



터키 동부서 규모 7.2 강진
진앙(규모7.2)
■ 앙카라
터키
시리아 이라크
300km
자료/미 지질조사국(USGS)
연합뉴스

키 동남부에 구조대를 급파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터키 정부는 자체적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아직까지는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에르지쉬군(郡)에서 24일 구조대원들이 붕괴된 건물 잔해를 헤치며 수색작업을 펴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한미FTA’ 국회연설 합의 불발

농어업 대책 등 마련 분주

여권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를 위해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24일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나흘간 ‘끝장토론’을 통해 반대진영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어느 정도 확보한 데

이어 야당이 요구해 온 통상절차법 처리, 농어업 피해대책 마련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이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발 됐지만 여야에 비준안 조기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는 등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3대 선결

과제’ 등 자신들이 요구해 온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이 없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전날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민주당의 13개 요구사항 가운데 최우선 순위인 1~3항 즉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같은 입장차로 여야는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장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야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10·2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 의장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야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국의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특히 여야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구간 경계조정 후속조치 없고 세입 줄어”

마광민·오희탁 북구의원

서 “강운태 광주시장이 도심 공동화 대책, 5개구 불균형 해소, 주민편의 제공, 현행 국회의원 정수 유지의 4대 원칙을 제시했으나 주민과 지역을 위한 어떤 사업 약속도 아직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 의원은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은 저버린 채 오직 국회의원 정수 유지를 위한 광주관 계리맨더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도심 공동화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희탁(민·대 선거구) 의원도 이날 구정질문을 통해 “구간경계조정 이후 북구 세입 20억 2800만원과 인구 2만 2374명이 동구와 서구로 빠져나갔다”며 “광주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북구는 광주시 차지구 중 사회복지비용관련 예산 지출이 가장 많아 이 같은 세수 감소는 큰 손실”이라며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시의 지원이 절실히”고 촉구했다.

한편, 북구의 2011년 사회복지비용 관련 예산은 기준 2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0.23%를 차지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한국정부, 구조대 급파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터키 동남부를 강타한 지 하루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수색·구조 작업이 본격화 한 가운데 확인된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었다.

이드리스 나임 사한 터키 내무장관은 에르지쉬 군(郡)에서 117명, 반시(市)에서 100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부상자는 109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건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색작업 악전고투=23~24일에 걸쳐 철야로 진행된 생존자 및 시신 수색작업은 추위와 지진에 따른 정전 사태 등으로 최악의 조건속에 진행됐다.

◇국제사회 지원의사 표명=이스라엘, 아르메니아, 미국, 러시아, 독일, 그리스 등 각국 정부는 터키에 위로의 뜻을 표하고 구조인력 파견과 구호물자 제공 등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강진 피해를 당한 터

1275명과 구급차 145대가 피해 현장으로 급파됐으며, 병력 6개 대대, 헬기 6대, C-130 군 화물 수송기 등도 구조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악전고투 속에서도 24일 새벽 한

건물에 매몰돼 있던 주민 24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터키 민영 도간 통신을 통해 전해졌다.

/연합뉴스

김문일 한나라당 전남도당위원장

“내년 총선 12개 지역구 모두 후보낼 것”



지난달 27일 취임한 김문일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 최근 적극별 외부 인사 영입 등을 통해 당직자 인선을 모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위원장은 1년여 동안 사고 지구당으로 방치되어 온 도당을 주스르고 당원 증원 및 조직강화를 목표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필승 의지를 밝혔다. 최근 조직정비를 마친 김 위원장으로부터 향후 전남도당 운영 계획 등을 들어봤다.

-1년여 동안 사고 지구당으로 방치돼 공백이 났을 것으로 보인다.

▲ 사고 지구당으로 방치된 뒤 사실상 도당은 식물인간이나 마찬 가지였다. 5000여명에 이르던 책임당원이 1800명으로 줄었다. 당협위원장이 공식인 지역 당협도 순천, 나주·화순, 장성·영광·함평 등 3곳에 달했다. 이 때문에 중앙당 정책이나 정부 정책을 지역민에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지역 민과 소통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영산강 사업을 반대할 때 전남도당은 영산강 강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을 지역에서 만들지 못했다. 도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지역에서 왜곡된 여론을 바로잡을 수 없는 점이 안타까웠다.

-1년여간 공백을 어떻게 메워갈 것인가.

▲ 우선 공석인 사고 당협위원장 3명을 모셨고, 제경 호남향우회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그리고 지역의 봉사활동 단체를 중심

-내년 총선은 어떻게 준비하나.

▲ 지금 지역 당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고 당협위원장에 새로 선임된 위원장들이 벌써 열심히 뛰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는 12개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석폐율제도 등이 도입된다면 일부 지역구의 경우 후보 경선 등의 경쟁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박재순 전 최고위원이 최근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임명되고, 김기룡 전 도당위원장이 특임장관 특임장관(1급)으로 영전하는 등 중앙당이 당을 위해 고생한 사람에 대해 반드시 배려해 준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역구에 최소한 책임 당원 500명은 있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 따라서 당협 차원에서 500여명의 책임당원을 모으는 일도 함께 할 것이다. 나부터 모범을 보일 것이다. 답곡·곡성·구례에서 최소 1000명의 책임당원 증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선도 있다.

▲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내에서 계파 이야기 많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무슨 계파가 필요하겠나. 계파보다는 당이 우선이다. 결선에서 이긴 대권후보에게 당세를 몰아 대통령을 만드는 게 도당의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이다.

우선 내년 총선은 지역에서 잘 치른다면 대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대통령 ‘한미FTA’ 국회연설 합의 불발

여권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를 위해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24일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나흘간 ‘끝장토론’을 통해 반대진영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명분을 어느 정도 확보한 데

이어 야당이 요구해 온 통상절차법 처리, 농어업 피해대책 마련 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이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발 됐지만 여야에 비준안 조기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는 등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3대 선결

과제’ 등 자신들이 요구해 온 주요 쟁점에 대한 진전이 없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전날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민주당의 13개 요구사항 가운데 최우선 순위인 1~3항 즉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및 장비 확대에 대해선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같은 입장차로 여야는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이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장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여야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여야는 10·26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정부, 구조대 급파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이 터키 동남부를 강타한 지 하루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수색·구조 작업이 본격화 한 가운데 확인된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었다.

이드리스 나임 사한 터키 내무장관은 에르지쉬 군(郡)에서 117명, 반시(市)에서 100명이 각각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부상자는 109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건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색작업 악전고투=23~24일에 걸쳐 철야로 진행된 생존자 및 시신 수색작업은 추위와 지진에 따른 정전 사태 등으로 최악의 조건속에 진행됐다.

◇국제사회 지원의사 표명=이스라엘, 아르메니아, 미국, 러시아, 독일, 그리스 등 각국 정부는 터키에 위로의 뜻을 표하고 구조인력 파견과 구호물자 제공 등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강진 피해를 당한 터

1275명과 구급차 145대가 피해 현장으로 급파됐으며, 병력 6개 대대, 헬기 6대, C-130 군 화물 수송기 등도 구조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악전고투 속에서도 24일 새벽 한

건물에 매몰돼 있던 주민 24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터키 민영 도간 통신을 통해 전해졌다.